

# 바람직한 환경 정책과 의제 설정을 위한 기자의 역할

-초보 기자를 위한 환경 보건 분야 보도 매뉴얼 개발 연구-

언론과환경포럼

정희정, 강한들, 김기범, 김아영, 남중영, 박상욱, 박수택, 선정수, 송찬영, 송현숙, 신동호, 신혜정, 안종주, 윤지로, 이정훈, 임항, 전성철, 조영리, 조홍섭, 최우리, 홍성철

## 1. 서론

환경 정책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이다. 환경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인 역할, 언론의 환경 의제 설정 기능도 약화되어 있다. ‘언론과 환경 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전·현직 기자, 기자 출신 언론학자, 환경·보건 분야 정책 홍보 종사자 등이 모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학습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지난 2020년 결성된 이후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올바른 정보 확산을 통해 환경 보도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언론과환경포럼의 멤버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기자연합회 주최 수습기자, 경력기자 교육 등에 강사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4년 언론과환경포럼은 환경과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던 선배 기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초보 환경 기자를 위한 매뉴얼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와 원고 작성 작업을 해왔다.

1장 ‘유해화학물질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자칫 언론이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 하도록 필요 이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지적했다. 건강 영향이 그리 치명적이지 않은 물질에 대한 과장된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껴 더 중요한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언론 보도의 역기능이 될 것이라며 경계했다.

2장 ‘댐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서는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언론과 환경단체의 협력과 전략적 실천이 지면을 벗어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교훈이 담겨 있다.

3장 ‘폐기물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를 페트병 대신 종이팩에 담아 시판하려는 아이디어가 재활용업계의 종이팩 재활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사례를 통해 하나의 제도와 정책을 평가할 때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인자 책임 원칙을 늘 상기하면서 기업과 정부에서 시작하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장 ‘기후위기와 새로운 서사 만들기’, 5장 ‘기업취재 노하우 및 공시자료 보는 법’에서는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의제 설정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남다른 시각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

6장 ‘담합(談合)’하라, 기후 환경 기자들이여’에서는 환경 의제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담합’의 경험을 전달하며 기자들과 언론사 간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 2. 본론

### 1) 유해화학물질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 물질이 검출됐긴 했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 물질은 기준치의 1~2%가량만 검출됐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생활화학제품이나 어린이 제품, 식품 등에서 특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할 때 정부 부처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기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정부 보도자료나 해명자료 등에서 술하게 본 내용이기도 하다.

하천수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일명 ‘살충제 달걀’ 사건이라 불린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목·손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등 비교적 최근의 사건부터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슴기살균제 포함 독성물질 관련 사건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담당 부처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등-은 놀라울 정도로 늘 ‘기준치’를 들먹이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일견 과학적으로 들리는 ‘기준치’ 타령은 매우 비겁하면서도, 진실을 감추는 변명이다. 대체로 독성학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장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살충제 달걀 사건에서 식약처는 문제가 됐던 대표적 살충제인 ‘피프로닐’에 대해 이 물질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2.6개 먹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는데, 시민들로서는 ‘안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내용이기도 했다.

하지만 독성학 전문가들이 포함된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며” 만성독성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였다. 이 학회는 “예를 들어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0.003mg/kg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만성)허용섭취량은 15분의 1인 0.0002 mg/kg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학회는 또 “피프로닐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크다”며 “급성독성이 적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휴대용 목·손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보이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환경단체가 전문가와 함께 이들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할 때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국제적인 인체 보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인체에 위협하지 않다”고 해명해 왔다. 환경단체가 밝힌 전자파 수치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기준인 833mG(밀리가우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주장은 다르다. 833mG는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가 아닌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악영향을 줄 만큼 높은 수치라는 얘기다. 이미 해외에서는 833mG보다 훨씬 작은 수치인 3~4mG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필자가 전자파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나라들 가운데 스위스 정부의 경우 전자파를 대기오염물질, 하천의 오염물질 등과 마찬가지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체로서 관리하고 있었다. 스위스의 경우는 전자제품들뿐 아니라 많은 밀양 주민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밀양 송전탑’ 사건의 바로 그 고압송전탑과 선로 역시 민가에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와 달리 국내에서 아직 전자파는 엄격한 관리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낮은 강도로 장기간 노출될 때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전자파에 대한 발암성 평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B군은 발암성 증거가 인간에서는 제한적이며, 실험동물에서도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내용을 환경단체에서는 국제적으로 전자파가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반면, 정부 등에서는 아직까지 발암물질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참고로 많은 언론들이 IARC의 자료를 인용해 발암물질을 1급, 2급 등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 IARC의 분류는 등급이 아닌 범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1군, 2A군, 2B군 또는 1그룹, 2A그룹, 2B그룹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처럼 낮은 강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자파의 위해 여부는 국내에선 아직까지 ‘과학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과학의 문제이기도 한 유해화학물질 보도에 대해 기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까.

유해화학물질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 하도록 필요 이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클릭 수만 높이려는 보도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영향에 있어 그리 치명적이지 않은 물질로 인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더 중요한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야말로 언론 보도의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제품이나 식품에 어느 정도 함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시민들이 그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즉, 사례마다 보도 여부와 보도의 경중을 따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사례 바이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의 가장 큰 준거는 ‘사전 예방주의(precautionary principle)’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은 물론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담겨 있는 ‘사전 예방주의(precautionary principle)’ 원칙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파의 위해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어떤 행동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동과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전 예방주의에 입각해 생각한다면 보도 여부나 내용의 수위 등에 대한 판단을 망설일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만약 어떤 유해화학물질 보도로 인해 다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크게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과학의 영역에도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과학자들이 논문 말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언론인 역시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물질로 인해 건강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기사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의 내용에 비해 다소 단정적이고, 때로 선정적이기까지 한 제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자 본인이 제목을 달든, 편집기자가 제목을 달든 다시 한번 기사 제목을 살펴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선의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보도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2) 댐 문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는 천천히, 그러다가 갑자기 온다. 버너 위 주전자의 물이 어느 순간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동강댐 백지화 싸움도 그랬다. 동강댐은 국책사업이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강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댐 건설에 반대하더라도 결국 강행될 사업으로 보였다.

이미 환경영향평가가서 환경부에 제출됐고 평가협의 단계였다. 시간이 없었다.

동강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중요했지만 일단 사업 진행을 막아야 했다. 먼저 국회 단계에서 불

필요한 예산을 차단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수몰예정지 내 토지보상을 못하도록 했다. 일단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사업은 되돌리기가 어렵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평가협의 전 평가서 비공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렵게 입수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타깃은 지형/지질 분야 석회암동굴 문제로 모아졌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수몰예정지 내 동굴을 조사해 환경영향평가의 결정적 오류를 밝혀냈다.

지금도 정선 제장마을에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강사랑에 자주 간다. 동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댐 건설에 맞서 싸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강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이다.

### (1)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시작

1997년 7월 동강의 숨은 비경을 처음 보았다. 치과의사였던 트랙코리아 이승건 원장의 제안으로 문산나루에서 어라연을 거쳐 섭새나루까지 래프팅을 했을 때였다. 이 원장은 “이런 비경을 수몰시켜서야 되겠느냐?”며 “환경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우이령보존회’(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운영위원회에 동강보존운동을 제안했다. 운영위원들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다. ‘우이령길 보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지켜야 한다면 다 우이령이다.’

이승건 원장이 “일단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운영위원 몇몇이 직접 동강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본 운영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강보존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 (2) 전문가들과 함께 ‘동강 12경’ 선정

1997년 여름 이후 동강 현장 탐방행사를 조직하고 참여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동강 12경’을 선정했다.

동강 12경은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경승지가 아니다. 영월군이나 정선군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다. 12경은 조양강과 동남천이 합쳐져 동강이 시작되는 정선 가수리에서부터 영월댐 건설예정지였던 영월 거운리까지를 대상으로 최고의 비경지대를 선정한 것이다.

‘가수리 느티나무’ ‘운치리 수동 섯다리’ ‘나리소와 바리소’ ‘백운산과 칠족령’ ‘고성산성과 주변 조망’ ‘바새 앞 뺑창(석회암 절벽)과 마을’ ‘연포마을과 황토 담배건조막’ ‘백룡동굴’ ‘황새여울과 강변 바위들’ ‘두꺼비바위와 모래톱’ ‘어라연’ ‘된꼬까리와 만지’ … 남한강 최고의 비경지대 동강에서 이 12곳을 뽑았다.

동강 12경 선정에 참여한 위원은 강운구(사진가) 남준기(내일신문 기자) 노영대(한국자연정보연구원장) 박희진(시인) 엄서호(경기대 교수) 이수용(수문출판사 대표) 이호신(한국화가) 이승건(트랙코리아 대표) 조상희(우이령보존회 운영위원장) 지영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진용선(정선아리랑연구소장) 최흥식(영월저널 발행인) 홍성래(영월교육청) 13명이었다.

이후 이호신 화백은 영월댐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박희진 시인과 함께 3년 동안 동강 구석구석을 답사하며 ‘동강 12경’을 모두 그림으로 그렸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로 3미터에 이르는 대작 ‘동강전도’를 완성했다.

### (3) “동강을 보면 동강을 지키게 된다”

동강댐(원래 명칭은 영월댐)은 1990년 10월 홍수조절용 댐으로 검토되다가 1991년 5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용수공급 목적을 더해 다목적댐으로 추진됐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가 내세웠던 논리의 핵심은 ‘2000년대 물 부족’이었다. 1993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2011년에는 ‘수자원 고갈’로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건교부

는 동강댐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댐 건설을 추진했다.

1960년대 시작된 댐 건설은 1980년대 들어 전성기를 맞았다. 1965년에 수립된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5~1975) 이후 댐 건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댐 개발 적지에는 대부분 댐이 건설됐다. 그러나 정부 내 개발부처는 댐 건설을 계속 추진했다.

1990년대부터는 댐 건설에 대한 주민 저항이 본격화됐다. 댐은 전력 생산과 용수 공급 등 효과도 있지만 고향 마을이 수몰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실향민, 댐 주변지역의 안개 발생 등 부작용도 많았다. 댐 건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반대여론도 커졌다.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1997년 여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도 일부 반대운동이 있었으나 지자체와 찬반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환경운동단체에 연대운동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997년 가을 우이정보존회가 동강 12경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동강댐 백지화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를 통해 대형댐 중심의 수자원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강 시민답사를 조직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조사국장은 “동강을 다녀오기만 하면 동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며 “그만큼 사람들이 동강 경관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 (4) 댐 반대 핵심구호 ‘동강은 흐른다’

환경운동 진영은 1998년부터 ‘동강댐 반대’를 넘어 ‘동강을 지키자’라는 구도를 만들었다. ‘동강은 흐른다’는 구호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런 전략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1998년 초반부터 언론매체들도 건교부의 ‘영월댐’ 대신 환경운동 진영의 ‘동강댐’이란 표현을 쓸 정도가 됐다.

1998년 4월 ‘동강댐 백지화 3개군(영월·정선·정선) 투쟁위원회(3개군 백투위)’가 결성돼 지역 차원의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당시 백투위 부위원장 가운데 한분은 “어느 현장사무실에서 에어컨 10대를 주문해 방문했더니 수공 영월댐사업단이었다”며 “내 양심상 당신들에게 에어컨 팔고 반대운동을 할 수 없다며 아예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반대운동의 승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해 여름엔 ‘동강포럼’을 구성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언론인과 교수, 정당인들이 참여했다. 동강포럼은 동강댐 백지화를 목표로 단기 전략을 짰고 장기적으로 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모색했다. 정당인들은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동강댐 관련 불필요한 예산을 차단했다. 댐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8년 12월 서울 한강에서 동강 지키기 뗏목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서울과 지역에서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 (5) “우리가 직접 동굴 확인합시다”

1998년 봄부터 영월댐(동강댐) 건설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벌어졌지만 찬반 양쪽 모두 ‘의견’만 있었지 정확한 ‘사실’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가장 먼저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했다. 당시엔 평가협의 전까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어렵게 두께 20cm 가량의 평가서 원문 전체를 확보했다. 영월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었다. 평가서의 명백한 오류를 밝혀내면 사업 추진에 큰 제동이 걸린다. 주요 부분을 복사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내용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부실한 평가서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동/식물 부분은 아주 큰 오류가 아니면 추가/보완을 하면 되지만 지형/지질 분야가 심각한 부실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영월댐 수몰지역 내 동굴’에 관한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석회암지대에 댐을 건설할 때 동굴의 존재는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서는 ‘백룡동굴을 제외하면 수십미터급 동굴 서너개밖에 없다’는 내용이 고작이었다.

1998년 5월 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영월댐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성채 당시 수공 건설본부장은 “댐 상류지역에는 30개의 동굴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개의 동굴이 수몰지역 안에 위치한다”며 “이 동굴들은 백룡동굴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연장 30미터 내외로 유역 외로 물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수공 관계자들은 “영월댐 지역은 20년 전 한전이 댐 건설을 추진할 때부터 배에 쌀가마 싣고 다니며 살살이 조사했다. 내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다. 굴물이 터진다는 주민들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1963년 10월 발생한 이탈리아 북부 바이온트 댐(Vajont dam) 붕괴 사고를 ‘석회암지대 대형댐 붕괴 사례’로 대국민 홍보를 했다. 바이온트 댐 담수 이후 석회암지대의 거대한 산이 댐 물속으로 흘러내렸다. 200미터가 넘는 높은 파도가 댐을 월류해 하류로 넘쳐 주민 2,500여명이 사망했다. 이는 세계 최악의 댐 붕괴사고로 기록된다.

환경운동연합과 동강포럼, 우이정보존회를 주축으로 “우리가 직접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동강댐 수몰지 내 동굴 숫자를 세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당시 동강에는 래프팅 업체가 없었다.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래저업체를 섭외했다.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고려인’ 이원재 대표가 탐사에 필요한 래프팅 보트 2대와 카약을 협찬해주었다. 동굴탐사를 위해 강원대학교 동굴탐사반 대원들도 불렀다.

#### (6) 수몰예정지 내 동굴 192개 확인

1998년 5월 15일 30여 명의 탐사대가 래프팅 보트와 카약에 나누어 타고 제장마을 바로 위 덕천리 강변을 출발했다. 출발한 지 10분 만에 거대한 하늘벽을 만났다. 하늘벽은 제장마을 남쪽 강변 건너편에 있는 높이 100미터가 넘는 석회암 절벽이다.

이 절벽 아래에 사람이 들어갈만한 바위굴이 보였다. 이 굴부터 조사해보기로 하고 강원대 동굴탐사반 김진(당시 4학년, 현 동굴연구회장) 대장과 대원 한명을 들여보냈다. 들어간 뒤 20분 정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높이 50미터 정도 되는 절벽 중간에서 김 대장이 불쑥 튀어나왔다.

“동굴 길이 120미터!”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건너편 강변에서 기다리던 모든 탐사대원들 입에서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탐사대는 탐사 3시간 만에 강물 바로 옆에 있는 100~300미터급 동굴 2개를 확인했다.

내일신문 등에 이런 사실이 크게 보도되면서 1999년 8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의 ‘영월댐 백지화 선언’ 때까지 동강댐 건설사업은 실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나와야 하는데, 평가서의 명백한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에 엄청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탐사를 계기로 수몰 예정지 내 동굴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서 확인된 동굴은 백룡동굴(길이 1,240m) 하미동굴(685m) 연포굴(650m) 등 기존에 알려진 동굴만 75개,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동굴도 117개에 이르렀다. 수몰예정지 안에서는 천연동굴 이외에 29개의 폐광 동굴도 확인됐다.

처음 발견된 천연동굴 가운데 27개는 강바닥과 연결돼 있는 ‘물굴’이었다. 이런 물굴은 담수할 경우 동굴을 통해 저수된 물이 빠져나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홍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몰지 내 백룡동굴 부근에서 60여개의 동굴이 확인되기도 했다. 댐에 물이 들이차면 이런 동굴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98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송현섭(국민회의) 의원은 한국동굴환경학회 등이 4월부터 6개월 동안 공동으로 실시한 동강댐 후보지 일대 동굴 탐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는 수자원공사가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밝힌 동굴 숫자인 30개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지역에 댐을 건설할 경우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7) 동강댐 이후 새만금 천성산 4대강 …

1999년 2~3월 환경운동연합이 벌인 33일 밤샘 농성, 거리 서명운동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 국회의원 문화예술인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동강 지키기 활동도 이어졌다. 1999년 3월 방영한 KBS 환경스페셜 ‘동강’ 편은 국민들 여론을 동강댐 반대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동강 래프팅에 인파가 몰려 동강 일대에 래프팅 업체가 400여곳 난립해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이 이어졌다. 1999년 4월에는 지구이벳,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월드워치연구소 등 국제환경단체들이 동강댐 백지화 호소문을 청와대로 발송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동강 살리기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2000년 6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동강댐 백지화는 사실상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축적돼온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항복한 것을 의미한다”며 “동강댐 백지화는 지난 30여년 동안 계속돼온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이 이제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강댐 백지화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03년 노무현정부 들어 ‘새만금 삼보일배’가 시작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해수유통을 전제로 전북지역을 위해 새만금 일부를 개발하자는 대안 논의도 있었고, 행정소송도 진행됐다.

2003년 7월 1심에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까지 방조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2004년 1월 2심에서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2005년 1월 법원의 조정권고안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사가 최종 추진됐다. 2006년 4월 방조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4월 외곽방조제가 준공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백지화를 공약했던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도 결국 원안대로 공사가 강행됐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국토환경 훼손의 본질은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국토를 훼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그런 사례 가운데 최악이다.

#### 3) 폐기물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물질의 발견이나 신기술의 발명, 더 나아가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누적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발견과 발명이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널리 적용되고 나서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예상치 못했던 폐해나 부작용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역풍은 종종 해당 신물질이나 신기술 자체의 매력과 쓰임새를 반감시키거나, 심지어 이를 퇴출시키기도 한다. ‘기적의 살충제’로 각광받던 DDT, 석면, 납이 포함된 휘발유,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이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신기술, 기계,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할 때 우리는 편리함이나 새로운 효용을 추구한다. 그것이 충족됐을 때 사람들은 그 기술과 물질을 어떤 신비한 후광과 함께 바라본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

든 편리한 것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르기 일쑤다. 그 대가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인류는 그 후광을 덮어쓴 물질에 너무 깊이 중독돼 있거나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차리게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플라스틱이야말로 그런 문명의 ‘축복을 가장한 저주’라는 이면을 가장 잘 대표한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는 이와 같은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한다. 다른 오염물질들처럼 줄이기, 즉 감량이 우선이다. 다만 다른 일부 오염물질과는 달리 플라스틱을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 의료용을 포함해서 필수적 용도가 너무 많은 데다 대체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감량 다음에는 재사용이 우선순위에 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사용과 이를 위한 보증금제는 일부 맥주, 소주병 등 일부 공병과 햇반 용기 등 소수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예를 들면 플라스틱 다회용 컵과 페트 맥주병을 포함해 더 많은 용기들에 확대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분리수거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재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순서대로 소각이나 매립 단계, 발효 단계 직전의 후순위에 있는 절차에 불과하다. 플라스틱은 종류도 다양하고, 재활용하기가 까다로운 탓에 선진국들에서도 그대로 버리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다.

감량을 우선시할 때에도 오염자부담원칙을 항상 염두에 뒀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바구니 지참, 종량제 봉투 등 소비자에게는 꾸준히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이나 포장재 재질의 개선 등 생산자에 대한 책임은 권고에 그치거나 푼돈 과징금을 물리는데 그쳐 왔다. 유럽 국가들처럼 감량, 재사용, 재활용 과정 전체에서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언론이 앞장서서 촉구해야 한다.

플라스틱 남용 문제에 맞서서 재활용이 만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부가 ‘쓰레기 감량’에 정책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설계와 생산, 유통 및 소비, 플라스틱 포장재의 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감량과 오염자부담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 또한 언론에서 자주 부각시키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기술이 아직 미흡하고, 그 효율도 기존 플라스틱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를 페트병 대신 종이팩에 담아 시판하려는 아이디어가 재활용 업계의 종이팩 재활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제도와 정책을 일부가 아닌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온다. 또한 점점 급증하게 될 태양광 폐패널을 사용시한이 지났더라도 재사용할 것인가, 재활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와 같은 어려운 선택지들에 기자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당시 직면한 현실에 비추어 재량하는 데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밖에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과학자들의 때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에 일희일비하며 무비판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대중 사이에 지나친 공포감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에서는 과대포장 문제를 취재하면서 화장품 병을 실제로 반으로 절단하는 실험을 했더니 두께가 3cm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도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험을 통한 보여주기식 글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또한 과대포장된 과자의 플라스틱 트레이는 내용물 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실험결과는 제과업계의 포장 방식 변경이라는 성과를 낳았다고 신 팀장은 말했다. 그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며 기자들은 원인자 책임 원칙을 늘 상기하면서 기업과 정부에서 시작하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 기후위기와 새로운 서사 만들기

“제주도에서 와서 제돌이에요.”

2012년 2월, 서울대공원 해양관이었다. 공연장에서 한참 홀라후프를 돌리다가 수족관 안쪽 내실로 돌아온 돌고래를 가리키며 사육사가 말했다.

부리 끝이 벗겨져 있었고, 오른쪽 눈 위에는 해적처럼 굵은 자국이 있었다. 한때 야생의 바다를 헤엄쳤던 JBD009.

제돌이는 제주도 바다를 헤엄치던 돌고래였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규율을 깨고 도전을 즐긴다. 제돌이도 그랬을 것이다. 고래연구소가 2007년부터 시작한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에서 9번째로 발견된 제주 돌고래(Jeju Bottlenose Dolphin)이었다. 하지만 제돌이는 2009년 5월1일 복순이와 함께 그물에 걸려 제주 중문의 수족관에 두 달 있다가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됐다. 이 수족관은 그물에 우연히 걸린 돌고래를 사들여 10년 넘게 쇼돌고래로 조련시켜 팔고 있었다.

제돌이의 이야기는 2012년 3월3일 <한겨레> 1면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기사 인터뷰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적절한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치면 제돌이는 야생에 돌아가 무리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인 3월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을 찾아 제돌이를 야생방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제돌이는 일 년 반 뒤인 7월18일 고향 바다로 떠났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

인간은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홀린다. 구석기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할 때부터다. 내가 아까 대낮에 매머드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 매머드가 필쩍 뛰어올라 나를 덮쳤는데, 글썽...

현대인도 서사에 자극받아 감동하고 행동하는 유전자를 가졌다. 자유, 도전, 배신, 영웅의 탄생, 권선징악, 출생의 비밀 같은 것들 말이다. 제돌이의 이야기는 가장 클래식한 서사를 가졌다. 부당한 이유로 감금되었던 이가 자유를 찾는 이야기. 희망과 구원 그리고 자유, 영화 벤허, 쇼생크 탈출 같은 이야기들.

제돌이 이후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 일부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어떤 돌고래는 새끼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 기사를 쓰고 ‘서사의 힘’을 절감했다.

광범위하게 수집한 팩트를 선별해 이런 서사에 실어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효율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도 마찬가지다. 대중을 행동하게 하는 힘은 서사다. 정부의 결단을 이끄는 것도 서사다.

#### (1) 기후변화 서사의 이면

20년 가까이 기후변화 문제를 보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다. 기후변화는 기사로 보여주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미진한 이유는 이러한 서사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언론이 기후변화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 들어서다. 초기의 보도 경향은 기후변화의 최전선(투발루, 북극 등)에 가서 실상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빙하가 무너진다, 북극곰이 줄어든다, 섬이 가라앉는다... 중앙일간지, 공중과 네트워크는 세계를 돌며 다들 하나씩은 이런 시리즈를 냈다.

나도 북극과 투발루 그리고 남극과 체르노빌을 차례로 다녀왔는데, 그때 느낀 것은 기자들이 현상을 너무 거두절미 단순화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삶의 복잡성을 놓친다는 점이었다.

투발루 사람들은 정말로 해수면 수위가 빠르게 높아져서, ‘웁~’ 하는 사이렌을 듣고, 국토를 허겁지겁 떠나려 하는 걸까? 선진국 시민들은 대개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

지 않다.<sup>1)</sup>

투발루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민을 선호했다. 젊은이들은 뉴질랜드로 넘어가 돈을 보내 가족을 먹여 살렸다. 변변한 공장은 물론 시장도 없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벼락처럼 투발루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아니다. 기저에는 사회경제적-심리적 요인들(송금 경제로 지탱되는 가난한 나라, 그곳을 침범하는 서구 글로벌 문화, 자연재난에 대한 심리적 공포 그리고 사회경제적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캐나다 북극권 서머셋 섬에서 빼적 마른 곰이 내일이라도 곧 죽을 모양으로 걸어가는 영상이 세계를 사로잡았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곧장 이 영상을 받아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콘텐츠로 활용했다. 며칠 뒤, 과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북극곰의 그런 형태는 기후변화가 주원인이 되어 굶주렸다고 보기보다는 암 질환 같은 병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얘기였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사과했다.

“2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조회하는 등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내러티브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 우리는 비디오 첫 줄에 ‘이것이 기후변화의 모습입니다’라고 밝혔는데, 돌이켜보면 자막을 너무 과하게 사용했다.”<sup>2)</sup>

‘기후변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개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절벽처럼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콘텐츠를 할리우드 영화 ‘투모로우’(2004)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북극의 바다 얼음이 녹아 바닷물 염분이 줄어들면서 대서양의 해류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고 미국 뉴욕에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다.

과학적 원리는 맞는다. 북대서양 해류가 아북극의 찬 바다와 그린란드 근처에 가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왜냐하면, 북극에는 바다얼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은 얼지만, 소금은 얼지 않는다. 얼음이 얼면서 소금기 머금은 밀도 높은 물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계속되는 결빙이 이렇게 내려간 물을 적도 쪽으로 느릿느릿 밀어낸다.

이러한 힘으로 바닷물은 표층과 심층을 오가며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구를 순환한다. 북극의 바다 얼음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가깝다. 심장의 펌프질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냈다가 받아오는 것처럼, 북극 바다의 결빙 운동은 따뜻한 곳에서 온 물을 받아 얼리고 일부는 내려보내서 심층 순환을 통해 따뜻한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것을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AMOC)라고 부른다. 이 순환류의 고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 (2) 느린 재난을 살펴보기

그런데, 중요한 게 잘못됐다. 어떻게 빙하기가 한 달 만에 오는가? 최근 들어 AMOC의 작동 이상 조짐을 탐구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한 달 만에 온다는 얘기는 없다. 가장 최근의 작동 이상 사태는 1만 2000년 전 ‘단스가드-오슈가 이벤트’인데, 돌발적 온난화 직후 수십 년 사이에 온도가 5도 이상 하강했다. 아주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영화 <투모로우> 같은 속도는 아니다.

언론인들은 기후변화를 곧잘 재난이 휩쓸고 간 폐허, 찰나의 폭발적인 이미지, 단 하나의 사건으로 형상화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기후변화라는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변화는 ‘느린 재난’(slow disaster)에 가깝다.

느린 재난에서 사건은 켜켜이 쌓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이산과 빈곤, 파괴로 나타난다. 모든 사건이 기후변화라는 단일 원인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대신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투

1) 남종영, 2007, 보름과 그믐, 죽음이 차오르는 나라, 한겨레21 652호, [online]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19390.html>

2) Cristina Mittermeier, Starving-Polar-Bear Photographer Recalls What Went Wrong. 2018, National Geographic. [online]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article/explore-through-the-lens-starving-polar-bear-photo>

과해 고통을 배가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다. 순수하게 자연적인 재난은 없다. 누적된 산업화의 결과이자,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결과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의 불균 등한 책임 배분에 따라 증폭한다.

예를 들어보자. 방글라데시 저지대의 농민은 해수면 상승으로 집이 수몰돼 긴급 구조를 외치지 않는다. 높아진 지하수 염분으로 흉작이 잦아져 가족 부양을 위해 도시로 나가 빈곤층이 된다.<sup>3)</sup> 북극곰 또한 마찬가지다. 북극곰의 멸종은 대량 아사 사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출생률의 감소, 먹이 활동의 변화, 서식지의 이동 등이 쌓여서 아주 천천히 나타난다.

페미니즘과 과학 철학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기후위기와 인류세를 헤쳐나가는 지혜로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를 강조한다.<sup>4)</sup>

그는 기술적 해법을 통해 기후위기에 벗어날 수 있을 거란 낙관주의에 대해서도, 인류 멸종 같은 종말론적 비관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둘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시급성을 강조할수록 체제 전환보다는 기술 해결이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취할까?

지난 100년 동안 화석연료에 판돈을 걸어 한몫 잡은 이들은 지금 재생에너지 기술로 새로운 좌판을 깔려고 한다. 동시에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고, 우주에 거울을 설치하고,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자는 기후공학 기업과 자본에 세금을 지원하고(혹은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우선일까? 그 돈은 느리고 힘들지만,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난방 연료가 없어 추운 밤을 보내는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발전소를 지어주는 데 쓰면 좋을 것 같다.

### (3) '공포의 서사'에 안주하지 말기

언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큰 관심을 끌게 하는 서사는 종말론적 서사다. '현재 추세대로 이어질 경우'라면서 특정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습관적으로' 인용하는 언론 관행도 문제다. 언론이 즐겨 쓰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RCP 8.5)는 이번 세기말 최대 5.7도가 오르는 경우를 상정한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세기말 석탄 사용량이 5배 늘고, 탄소 배출량은 2050년에 현재 수준의 두 배에 이르는 걸 가정한다. 선진국이 이미 에너지 전환 대열에 뛰어든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낸다. 2024년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정책과 추세를 반영할 경우 2100년에 2.6~3.1도 오르는데, 이게 현실적인 숫자에 가깝다.<sup>5)</sup> 이 또한 결코 적지 않은 온도 상승치다. 그런데도 언론인은 더 숫자를 키우고 싶어 한다.

해러웨이는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기후) 비상사태'(emergency)라는 말 대신 '긴급성'(urgency)이라는 말을 쓰자고 한다. 비상사태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관계없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고 그 신화 속에 강박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 부족 담론은 우리가 기술에 의존해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게 한다. 원자력발전으로 돌아가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고, 우주에 거울을 설치하고, 대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직접탄소포집장치(DAC)를 개발하는 기술에 나라의 판돈을 걸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한다. 이미 한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기후 대응 기술을 지원하는 데 많은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 그게 우선일까? 그 돈은 느리고 힘들지만,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난방 연료가 없어 추운 밤을 보내는 개도국 주민에게 발전소를 짓는 데 쓰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보자. 설사 그렇게 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우리는 행복한가? 탄소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한 기업과 선진국과 부자에게만 행복한 미래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구체적인 삶이다.

3) 로리 파슨스, 『제앙의 지리학』, 2024, 오월의봄, p.62.

4)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 2016, 마농지.

5)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4. [online] <https://www.unep.org/resources/emissions-gap-report-2024>

인류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펼쳐지는 것은 종말론적 미래도, 약속받은 미래도 아니다. 그런 결정론적인 이야기들은 당장 관심을 끌지언정 우리를 구체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해러웨이가 주목하는 것은 “전면적인 화해나 복구가 아니라 부분적인 회복 그리고 함께 잘 지내기를 위한 평범한 가능성들”이다. 그는 인간을 포함해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까지를 아울러 ‘크리터’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닌 모든 크리터의 이야기, 즉 ‘복수 종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한다. 계속되는 실뜨기를 통해 다른 형태가 창조되듯이, 크리터와 크리터의 연결 관계를 재조합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혹은 은폐되었던 세계가 펼쳐진다.

환경 기사를 쓰는 작가로서 서사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공포주의도 아닌 기술중심주의도 아닌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다. 많은 것이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제시해 주는 그림을 앞다퉈 보도하는 것보다 뿌옇게 낀 먼지를 닦아내어 잘 보이지 않았던 실체와 관계를 보여줄 때 기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다. 해러웨이는 이렇게 썼다.

“누구도 모든 곳에 살지는 못한다. 누구나 어딘가에는 산다. 어떤 것도 모든 것에 연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언가와 연결된다.”

#### 5) 기업취재 노하우 및 공시자료 보는 법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부처 및 업계 출입 기자들은 너무 바쁘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그날 소화할 기사 일정을 정리해 데스크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온라인뉴스'를 위해 한 시간 정도 출입처들의 보도자료들을 처리해야 한다. (일부 매체는 보도자료의 기사 처리를 하지 않지만, 온라인뉴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도자료를 기사 처리하는 매체들이 늘고 있다) 이후 오후 마감 기획기사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해야 한다. 오전에 출입처 행사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어그러진다. 행사 중에도 일부 기사를 처리해야 하기도 한다.

점심식사도 취재 시간이다. 기업이나 정부부처 등 출입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요즘 흐름에 대해 '귀동냥'해야 한다.

점심 뒤에야 비로소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면서, 기사 정리에 들어갈 수 있다.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마감 준비를 한다. 기사를 쓰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다. 기사의 제목과 부제를 먼저 정해 놓고 기사를 쓰기 시작해도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후속 취재가 이어진다. 가능한 빨리 마감하고 송고한 뒤, 데스크와 연락하며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데스크의 스타일은 2~3일이면 알게 된다. 가능한 그 스타일에 맞춰 마감 기사의 무사통과 비율을 높여야 한다. 자꾸 제동이 걸리면, 서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쌓인다.

데스크 마감이 끝나기 전까지 기자들은 취재 뒷얘기와 출입처 동향을 정리해 데스크에게 보고한다. 업계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동향을 잘 쓰는 것도 기자의 역량이고, 데스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감 뒤는 역시 취재를 위한 저녁자리 참석이다. 신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새로운 투자흐름, 사업의 어려움, 다가오는 이벤트 등 최신동향을 잘 챙겨야 한다. 물론 취재원과의 관계도 돈독히 해야 한다. 평생 갈 '형님, 동생' 관계를 만들면서 말이다.

#### (1) 아는 만큼 보인다 - 기업공시

기자들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 한 기업에 대해 진득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늘 부족하다. 어느 출입처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기업의 경우 기자가 그 기업에 대해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기업은 쉽게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다. 기자가 많이 알수록 속내가 더 잘 드러난다. 기업 입

장에서 보면 기자들은 보통 한 기업에 대해 5% 정도 알고 있다. 10%를 안다면 아주 많이 아는 기자이다.

이를 위해 기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공시사항을 챙기는 것이다. 기업은 투자자·금융권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공시를 통해 대화를 한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통해 직접 묻기도 하며, 기업은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늘 공시사항을 살펴야 한다.

경제지의 경우 공시만 전담하는 당면기자를 정해 놓고 공시사항을 짧게 보도하기도 한다. 이후 필요시 출입 기자가 해당 내용을 심층 보도한다.

공시내용은 다 중요하다. 다 기삿거리가 된다. 물론 공시에는 결과만 짧게 알리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다. 중요성을 안다면 바로 기사를 쓰고, 모른다면 홍보실 등을 통해 물어봐야 한다. 왜 공시를 했는지.

공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업보고서이다. 연초에 나오는 지난해 연간사업보고서, 이후 분기별 사업보고서, 반기별 사업보고서 등이 일정 기간을 두고 나온다.

사업보고서는 그 기업의 역사이다. 설립 때부터 보고서가 나온 현재까지의 상황을 모두 담고 있다.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주식수, 정관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실적 상세내용, 임원과 대주주 상황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처음에 볼 때는 다소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읽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다. 평소 몰랐던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보다 보면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 여기가 포인트이다.

지난 분기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을 찾아내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아직 보도된 적이 없다면, 이건 일종의 특종이다. 또한 사업보고서의 주석 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가끔 의미있는 내용이 숨어있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 임원들의 인적 사항을 챙겨보는 것도 흥미롭다. 사내 임원들의 출신 학교와 주요 경력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킹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사업보고서에 익숙해지면 그 기자는 이미 그 기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주요 기업들의 경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리포트를 살핀다. 이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와의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경우 본인의 이름이 언론에 회자되기를 원하는 전문가들이다.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문가 멘트로 애널리스트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

## (2) 새로운 스토리 - 非재무보고서

기후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면서 환경과 사회, 기업거버넌스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같은 관심들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비재무보고서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보고서들은 해당 기업을 들여다 보는 또 하나의 창(窓)이 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보고서 등 일부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적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어 새로운 취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들도 꾸준히 읽다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기업들이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어떤 리스크들을 지니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한 줄 한 줄이 모두 기삿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기자라면 꼭 관심을 갖고 읽어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나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다

보면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왜 달라졌는지 그 배경을 파악해보면 기삿거리가 보인다.

'중대성평가' 또는 '이중중대성' 등 생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대성이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온실가스, 폐기물 배출 등이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권 등이 중대성 평가항목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이중중대성은 기업의 매출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축에도 중요한 사안의 경우를 찾아 중요 이슈로 보고 기업이 이를 챙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TCFD보고서는 지구기온이 1.5°C, 2.0°C 등 올라갈 때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시나리오 형태로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들은 아주 많은 내용들이 축약·정리된 것이어서 한줄 한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취재하다 보면 다양한 기삿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EU과 미국 등의 각종 온실가스배출 규제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각 기업들의 비재무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사로 이어질 수 있다.

### (3) 국내외 이슈와 흐름 파악하기

기업을 취재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하나하나의 움직임보다 업계의 전체적인 흐름이 규모가 더 크고, 필요시 정부의 정책도 투입되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이 흐름에 대한 개별 기업의 입장이나 대응도 알아볼 수 있어 기사를 취재에도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전 세계 또는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경 시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비중있는 기사들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 사안이어서 특정 기업이나 학회, 협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주변 기관들과의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국내 신문이나 방송, 해외 뉴스들을 계속 챙겨보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슈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크게 5가지 정도의 큰 흐름과 각각 4가지의 작은 흐름 등 약 20개의 흐름을 정해 놓고 그 변화를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를 볼 때도, 취재원을 만났을 때도 이 20여 가지 정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것보다 넓은 거미줄을 펼쳐놓고 있으면서, 미세한 터치나 입질까지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에너지 분야의 요즘 흐름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美 대선 ▲전기차 케즘(Chasm) ▲기후변동 피해 증가 ▲2030년 NDC달성 지체 우려 ▲IT업계 에너지소비량 증가 등을, 국내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개발 지체(RE100 부족) ▲송전망 태부족 ▲한전·가스공사 적자 지속 ▲온실가스국외감축 2030년 3,750만톤 확보 비상 ▲UN플라스틱협약 부산회의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위 각 흐름 또는 이슈들을 다시 4개씩 더 세분해 들어가 좀 더 상세한 흐름들을 잡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이나 결정 등이 취재되면 바로 기사화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흐름에 각 기업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지 취재를 하게 되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취재 심도를 더욱 깊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4) 함께 고민하다보면, 마음이 열린다

특정 업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와 비재무보고서들을 서로 비교하며 열심히 챙기면서, 관련 업계의 국내외 이슈와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잘 파악하게 된다면 해당 기자는 어느 정도 전문가 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자는 업계와 함께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즉 이심전심, 동병상련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취재기자가 서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좀 더 부담 없이 함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도 된다.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나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때 언론은 '구경꾼'에 그칠 수 있다. 그저 잔소리나 하는 것에 멈추어 있다는 생각에 기자들은 기운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넘어서 언론도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슈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구경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서로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기자들이 인정하는 기업 홍보맨들에게는 2가지 노하우가 있다. 첫번째는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을 열심히 읽고 계속 댓글을 다는 것이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화를 걸면 항상 기사를 쓸 수 있는 소재들을 얘기해 준다. 해당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 업계의 새로운 흐름과 고민을, 다시 말하면 기삿거리를 늘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홍보맨은 다양한 매체의 기사들을 보면서 약 20여 개의 이슈와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다. 기자들은 이 홍보맨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 기자의 입장에서 이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 6) '담합(談合)'하라, 기후 환경 기자들이여

'무슨 뜬금없는 소리? 대중에게 널리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경쟁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기자들에게 담합, 짬짜미를 하라니, 가당치 않은 소리!' -- '담합'이란 말에 기후 환경 취재를 맡은 당신은 머리를 갸우뚱하거나 반감을 품을 것이다. 더 들을 것도 읽을 것도 없다고 고개를 돌리고 싶을 것이다. 그런 마음, 그런 결기를 가진 현직의 기후 환경 언론인 여러분에게 은퇴한 전직자로서 고마운 마음과 기대감,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는 새 정권이 소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궁금증이 높았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이 대선에 나오면서 내건 핵심 공약으로 국토 환경을 돌이킬 수 없도록 뒤집는 것이기에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본인은 물론 인수위 측도, 새 정부 고위 관리들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며 손사래 치기에 바빴다.

무모하고 허황한 토목 삼질 공약을 설마 몇대로 서두를까 싶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새 정부 한쪽에서 흘러나온 수상한 문건을 하나 접했다. 눈이 번쩍 커졌다. 아무렴,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걸 벌이자는 거였지,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명박 임기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과 일정이 촘촘히 담겨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

기 위해 공사 구간을 일정 규모 이하로 작게 나눈다는 토목업계 관행적 편법까지 꼼꼼하게 전략으로 담겼다.

그해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한나라당)은 논란 높은 대운하를 공약에서도 빼놓고 쉬쉬하던 터였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이 한통속으로 언론, 나아가 주권자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특종감이 분명했다. 사회부장과 논의하고 입수한 문건 검증에 들어갔다. 환경단체 활동가, 토목건설 분야 학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운하 사업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고 인수위도 관여해 비밀 회의까지 열어 확정된 추진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한달 시점인 2008년 3월27일 SBS 8시뉴스에서 '대운하..구체계획 없다더니'란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반향은 컸다. 그러나 아쉬웠다. 문건에 담긴 정부 계획의 문제점, 편법 탈법적인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싶었다. 세 쪽지로 단락을 나누자고 보도 책임자에게 건의했다. 안 된다, 한 쪽지로 하라. 이 복잡하고 방대한 걸 어떻게... 그러면 조금만 길게 한 2분 반에서 3분으로... 그것도 안 된다, 2분으로 한 쪽지! 줄다리기 끝에 앵커 소개 부분을 포함해 2분21초로 엮었다.

SBS 보도는 기자의 희망과 달리 용두사미로 그친 격이었다. 오기가 돋았다. 뉴스 편집을 마치고 한겨레 조홍섭 환경전문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운하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개략적인 내용을 털어놓았다. 방송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게 마련, 한겨레가 받아서 활자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스 가치를 간파한 조 기자는 한겨레 국토해양부 담당 기자에게 다리를 놓았다. 뉴스가 전파를 탈 때 팩스로 문건을 전송했다. 대운하 구체 계획은 이튿날 아침 한겨레를 통해 상세히 알려졌다.

2003년에 부장 승진을 하면서 회사와 상의해 데스크에 남지 않고 현장으로 나왔다. 기자의 본령은 현장, 현장에서 흰 머리 휘날리며 뛰다가 은퇴하는 기자로 남겠다는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잦은 부서 이동으로 분야별 취재가 설익으면 민망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전하는 취재 보도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마련, 관심 가고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 파고 드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늘어가는 환경 현안에 언론 대응은 단발적이었다. 성장 개발의 그늘 속 환경에 빛을 던지리라 다짐하고 나섰다.

당시에 환경부에 출입하던 기자들 가운데는 이른 바 터줏대감들이 여럿이었다. 출입처를 바꾸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환경 정책과 현장을 취재하다보니 이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취재 역량, 분석 능력, 필력이 뛰어났다. 환경부 간부와 실무 공무원은 물론 산하 기관 연구진, 환경 분야 연구자,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두루 안면을 익혀뒀으니 취재 보도의 차원이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성장과 개발에 치중하는 나라에서 이들은 변두리, 소수, 찬밥, 애물단지 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열심이였다.

환경부 출입기자 시절에 자주 재미, 즐거움, 보람을 누릴 수 있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덮치는 황사에 온나라가 고통을 받자 출입기자단이 환경부, 시민단체와 협의해 황사 발원지 공동 취재를 기획했다. 몽골 현지에서 황사의 원인과 피해, 현지의 사막화, 기후변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취재 경비는 각자 출장비를 받아와 항공료와 취재 경비로 냈다. 환경 언론의 지평을 넓히고 언론인으로 역량을 높인 기회였다. 공동취재 보도를 통해 환경부는 황사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환경 보도의 무력감을 절감할 수밖에 없던 때도 있었다. 군산에서 부안 사이 광대한 서해안 갯벌을 농지로 간척한다면서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최종 물막이를 감행한 정부가 언필칭 '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였다. 양대 정당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고 국회를 지배한다. 반 생태, 반 환경 정책과 입법에 동분서주하기는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 환경 의제가 개발 성장에 밀려 빛을 잃어갔다. 환경부 출입기자들 사이에 동지 의식 비슷한

공감대가 생겨났다.

출입처마다 '외로운 늑대'로 일관하는 극소수도 있게 마련이다. 소위 타사 '물 먹이기 단독 보도'로 자기 존재감 과시하기를 즐긴다. 환경부가 정책을 다듬거나 산하 기관들이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파고 들어 설익은 정보를 빼내서는 확정된 정책이나 연구 결과인 양 써 제졌다. 한 매체가 바람을 뺀 뉴스는 대개 타 매체에 실리기는 어렵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성과를 보도자료로 엮어 많은 매체를 통해 알리고 싶었지만 뒤통수 맞은 공무원, 연구자는 경위서 쓰느라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특종감이라면 혼자 하시오. 나도 그런 건 혼자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2,3단짜리 웬만한 건 서로 알리고 풀해서 함께 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그쪽 시청자, 독자가 다 다들 텐데, 우리가 함께 전하면 결국 환경 뉴스와 시민 대중의 접점이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민들 환경 의식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도 기획 취재를 더 할 수도 있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기자들이 나의 제의를 이해하고 찬동해주었다. '담합' 취재 보도가 늘어났다.

2009년 3월 초, 전남 순천의 두루미 주제 행사에 참가했다가 시가 순천만 대대들의 전봇대 282개와 하늘을 가로지른 전깃줄을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운다는 걸 알게 됐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날다가 전깃줄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자연 훼손, 생물다양성 유지 따위는 안중에 없는 대다수 지자체, 정부 행태와 견주어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여겼다. 새 한 마리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시와 시민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보기 드문 일인만큼 뉴스 가치도 높다고 여겼다.

당시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물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는 답변에는 실망감이 들었다. 마침 한달 뒤에 다시 순천에서 두루미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 시점에 맞춰 전봇대 철거를 선언하고 사업에 들어간다면 순천이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증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대운하-4대강 사업으로 온 강과 땅이 만신창이가 되고 희귀 야생조류들 서식지도 사라지는 참이었다. 순천시 과장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순천시의 전봇대 철거 시책에 대해 알리고 공동 취재를 제안했다. 흥미롭고 의미도 있는 좋은 기삿거리라며 다수의 기자들이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방송, 조간, 석간, 경제지, 통신까지 15개 사 썸의 중앙 매체 기자들이 전세 버스를 마련해 1박2일 공동 취재에 올랐다. 순천시장과 두루미 보호 시민그룹 대표가 함께 크레인 장비를 타고 올라가 대대들 전봇대 전선을 절단했다. 순천만 전봇대 철거 뉴스는 뉴스통신을 비롯해 거의 모든 방송,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해 7월 중순쯤 순천시 담당 과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 국장 승진했습니다!' 들뜬 목소리의 주인공은 환경부 기자단 덕분에 힘을 얻어 계획을 당겨 전봇대를 7월 안에 모두 뽑아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만 보전과 함께 어민과 농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시책을 세워 착착 진행중이라는 것이었다. 제비 다리 고쳐준 흥부가 복 받지 않았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순천 흥부들에겐 뉴스를 전파한 우리들이 바로 박씨 물어다 준 제비였다. 전봇대 사라진 순천만에 흑두루미는 물론 탐방객도 부쩍 늘었다.

환경부 출입기자들은 합동취재를 이어갔다. 남북 분단과 대립의 산물 DMZ 비무장지대를 흔히 자연이 남아있는 생태계의 보고 운운하지만 실상은 철조망을 비롯해 군사시설물로 생태를 분단하는 장애물이다. 인접한 민통지역(민간인출입통제지역: CCZ)마저 콘크리트 수로 같은 시설물과 개간으로 숲이 밀려나고 습지가 사라지며 외지인들 투기 무대로 전락했다. DMZ생태연구소(소장 김승호)의 조사 연구를 기자단이 공유하고 DMZ와 민통지역 생태계 오염 훼손 실태를 함께 취재해 보도했다.

환경부 출입기자들은 원래 '환경기자클럽'의 당연직 회원이다.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한 그해 1990년 12월 4일 환경언론창달을 통한 국토와 지구환경보전,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듬해 낙동강 폐놀오염 사태가 터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환경 보도의 지평을 넓혔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열어 환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했고 강원도 동강댐 건설 문제 탐사 취재에도 적극 힘을 쏟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댐 백지화를 선언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금 기사실엔 간판이라도 남았을까?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행할 때 나는 환경기자클럽 회장이었지만 회사에서 환경전문기자직을 박탈당하고 논설위원으로 좌천당했다. 그래도 환경 관련 제보를 검토하고 회원들에게 알려 공동취재를 이어갔다. 환경활동가들이 이 해 여름 새벽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을 점거해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을 한다는 제보를 각자 기자들에게 전하고 공동취재 보도를 이끌었다. 기자들 신의 덕분에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취재 정보가 새 나가지도 않았다.

그 뒤로도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 결과를 환경기자클럽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현장 취재를 기획했다. 하천 경관을 망치고 생태를 파괴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에 여러 매체 기자들이 모였다. 대통령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 업적이라고 내세운 청계천 '복원'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업자를 시켜 물고기를 풀어놓고 '복원 뒤 생태계가 회복됐다'고 과장하는 행태도 공동으로 취재했다. 그러나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뉴스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환경 언론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단독 보도, 특종 뉴스라도 정부와 권력이 걸끄러워할 내용이면 언론사 간부들, 책임자, 경영자는 대개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이다. 언론사에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밖으로 멀리, 많이 내다볼 수 있고 그만큼 바깥 세계와 점점도 늘어난다. 언론 외부 세력들과 이런저런 관계도 늘어난다. 그런 세력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도 이익을 남겨야 할 기업이다보니 혹시 모를 경영상의 압박을 피하거나 줄이도록 대비도 해야 한다. 보도 부문 간부나 책임자는 종종 대외 창구, 로비스트로 전략하기도 한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른 지금도 환경 의제가 국가는 물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한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농림, 수산은 물론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기상이변을 야기하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닥쳐 인류의 존망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힘을 뿌리부터 캐 없애는 훼손과 파괴가 개발과 성장의 외피를 둘러싼 채 지속되고 있다. 제동을 걸어야 할 환경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은 지리멸렬하다.

오염과 파괴를 일삼는 세력은 잘도 뭉친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평가하는 소위 '환경영향평가' 제도만 해도 개발사업자를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법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도 국회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경 현장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뭉쳐야 한다. 힘을 모아 기후와 환경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짬짜미, 담합이라도 좋다. 알려야 할 것을 제대로, 널리, 자주 알리는 건 언론인의 책무다. 이런 짬짜미, 담합이야말로 '바람직한 담합, 아름다운 담합' 아니겠는가?

### 3. 결론

이 연구는 환경 분야 보도를 시작하는 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보건 분야에 취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기자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언론과 환경 포럼은 그동안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원고들을 모아 초보 환경 언론인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편집해 출판할 계획이다. 이는 비단 언론인뿐 아니라 환경단체 활동가,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준비중인 가이드북의 목차(안)는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와 에너지

- (1) 기상과 재난
- (2) 에너지와 산업
- (3) 국제 흐름
- (4) COP 취재 어떻게 할 것인가
- (5) 잘못된 보도 사례에서 배울 것들과 제언

#### 2. 환경보건 :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 (1) 환경보건, 어떻게 보도할까
- (2) 미세먼지 보도와 중국혐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 (4) 유해화학물질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 3. 폐기물과 자원순환

- (1)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제언
- (2) 쓰레기 속 특종은 '기본'에서 나온다
- (3) 홈런볼 트레이, 240번이나 떨어뜨려본 이유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케이스 스터디-

#### 4. 물과 수질, 댐

- (1) 물 문제, 어떻게 보도할까
- (2) 댐 문제 어떻게 보도할까-동강댐 정책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 5. 동물과 생태계

- (1) 생태계를 다루는 언론의 편견
- (2) 새로운 서사 만들기
- (3) 동물 취재의 노하우와 예의

#### 6. 노하우

- (1) 팩트체크 방법론
- (2) 국회(의원) 취재 노하우
- (3) 기업 취재 노하우 및 공시자료 보는 법
- (4) 전문가와 논문 활용법
- (5) 해외 논문 활용 기사 쓰기 노하우
- (6) 관공서와 공무원 활용법

- **참고문헌**

- 남종영, 2007, 보름과 그림, 죽음이 차오르는 나라, 한겨레21 652호, [online]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19390.html>
- Cristina Mittermeier, Starving-Polar-Bear Photographer Recalls What Went Wrong. 2018, National Geographic. [online]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article/explore-through-the-lens-starving-polar-bear-photo>
- 로리 파슨스, 『재앙의 지리학』, 2024, 오월의봄, p.62.
-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 2016, 마농지.
-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4. [online] <https://www.unep.org/resources/emissions-gap-report-2024>